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기업구조조정제도 (Work Out) 관련 검토 및 제언

2015. 10

목 차

- I. 민간투자사업 기업구조조정제도(Work Out) 再考의 필요성
- I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
- III.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 IV.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Work Out
- V.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구제금융
- VI. 종합 검토 및 제언



(1) 민간투자법의 취지 및 발전 현황

- ①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수요소
- ② 민자사업 초기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환차손 보장,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유도 → 활성화를 위한 사익 강조 측면
- ③ 민자사업 활성화 이후 : MRG 제도 철회, 표준실시협약안 마련,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등
→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측면 강조

(2) 최근의 사업재구조화 경향과 워크아웃

- ① MRG 있는 사업에 대한 SCS 방식의 재구조화
→ 국가 재정 부담 완화라는 측면의 공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재구조화
- ② 최근 수요 부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도산 위험 사업 발생
→ 수요 부족이 사업시행자만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가? (vs. 개발계획 지연 · 연계시설 미확충 등 수요 추정 전제사실의 문제,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협약에 반영된 수요의 문제)
→ 수요 부족 사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워크아웃) 역시 사회기반시설의 유지 ·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을 고려한 재구조화의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3) 민간투자사업 기업구조조정제도 '도입'?

- ① 기존 기업구조조정 또는 회생 관련 제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Work Out,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구제금융(이하 제도 상술)
- ② 제도 신설 vs. 기존 제도 활용
- ③ 기존 제도의 적용 실무례
 - 기업회생절차 :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회생 사례는 없으나, 출자자 회생시 자금제공채권 감액 등이 이루어지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법원의 민자사업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채무재조정(상환일정 유예, 이자율 조정 등)과 같은 사적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음
- ④ 기존 제도 적용의 걸림돌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이하 제언에서 상술)

(1) 요건

- 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1호)
-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 채권자**(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이상 채권), **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의 10분의 1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2) 절차

- ① **개시신청**(제34조)
- ②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제43조), **중지명령**(개별적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것, 제44조), **포괄적 중지명령**(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 제45조)
- ③ **개시결정** :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제58조), 법원은 관리인(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을 선임하여야 하며(제74조),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제56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

- ④ **채권조사** : 관리인은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등 목록을 작성하며(제147조), 채권자 등은 그 채권을 법원에 신고(제148조, 제149조)
- ⑤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인가** : (i) 실무상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며, (ii)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담보권자·주주의 가결절차를 거치고(제237조), (iii)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확정(제242조)
- ⑥ **회생계획의 수행**
- ⑦ **회생절차의 종결** :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종결결정을 함(제283조)

(3) 특징(장 · 단점)

①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특별보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관리인은 **부인권**(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소시킨 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 제100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선택권**(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119조) 등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을 보유

② 파급효과의 중대성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일반거래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체의 채무변제 및 새로운 채무부담이 불가능하여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

③ 채무자의 악용가능성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에 대한 지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하므로(제74조 제2항), 자구노력만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있음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1) 요건

- ① (국내)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이고(제2조 제4호),
- ②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분류, 제2조 제5호)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였으며(제4조 제1항),
- ③ 그 통보를 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4조 제3항)

(2) 절차

- ① **개시신청** :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 통보를 받은 기업이 그 판단 하에 신청(제4조 제3항)
- ②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되고, 주채권은행이 주관(제15조 제1항·제2항),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 결정,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 사항을 심의·의결(제17조 제1항)
- ③ **채권행사의 유예** : (i)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이 있는 날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ii) 채권금융기관은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정함(최장 3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

- ④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신고**(제19조 제1항)
- ⑤ **경영정상화약정 체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 간에 체결, 해당 약정에는 인원•조직과 임금의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계획과 신주발행•자본감소와 같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제8조)
- ⑥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가 가능(제10조 제1항), 신규 신용공여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인정(신규 신용공여에 대한 유인제공을 위함, 제11조)
- ⑦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 : 채권재조정이나 신규 신용공여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반대채권자는 그 의결일로부터 7일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 ⑧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여부 점검** : 주채권은행은 분기별로 경영정상화약정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보고(제9조)

(3) 특징(장 · 단점)

① 신속한 재무조정

공동관리절차 중 정상적인 상거래가 가능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과 달리 통상적으로 신규자금지원이 수반되는 관계로, 신속한 재무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보전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기업회생에 효율적임

② 채권자의 범위 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이러한 비협약채권자의 비중이 클 경우 효과적인 구조조정 불가능하며, 비협약채권자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③ 자산매각 및 단기 채권회수에 집중 우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의 성격상 기업경영정상화보다 자산매각 및 단기 채권회수에 집중될 우려 있음

④ 해외채권기관의 회수를 막을 수 없는 한계 있음

4.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Work Out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기초한 work Out에는 (i)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ii)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iii)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등이 있고, 그 요건이 각각 상이함.

(1)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약칭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1) 요건

- ① 협약 채권금융기관(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3개 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이고(제2조 제4호),
- ②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제2조 제5호,)으로 판단하였고, (제16조 제1항)
- ③ 해당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16조 제3항)

2) 절차

- ① 개시신청 : 부실징후기업의 판단 하에 신청

4.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Work Out

-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구성** : 해당 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되고, 주채권은행이 주관(제13조 제1항·제2항),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 결정,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 사항을 심의·의결(제14조 제1항)
- ③ **채권행사의 유예**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서 최장 2개월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정함(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제18조 제3항)
- ④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신고**(제19조 제1항)
- 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특별약정”) 체결**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기업 간에 체결, 해당 약정에는 자구이행, 제3자 매각 등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계획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계획 등이 포함(제24조)
- ⑥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자산인수**: 채권은행자율협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또는 자산인수 추진 가능(제21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달리 신규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변제권 없음
- ⑦ **반대채권자 매수청구권** :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지원 등에 대한 채권은행자율협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그 의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채권매수 청구 가능(제22조 제1항)
- ⑧ **특별약정의 이행점검** : 주채권은행은 분기별로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보고(제25조)

4.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Work Out

- ⑨ **공동관리절차 등의 종결** :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이 양호하여 경영정상화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의결로써 공동관리절차를 종결(제28조)

(2) 「Fast Track 프로그램공동운영 지침」에 따른 워크아웃

1) 요건

- ①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Fast-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적용여부 결정(제8조 제1항)
- ② 협약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한정(제2조 제4호)

2) 절차

- ① **대상기업의 결정** : Fast-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에서 결정(제8조 제1항)
- ② **채권은행(보증기관 제외)의 지원** :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고(제8조 제2항),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인정(제19조 제1항)

4.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 ③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필요시 대상기업과 주채권은행 간 체결 가능 (제8조 제6항)
- ④ **보증기관의 지원** : 보증기관의 판단 하에 신규 신용보증 지원, 보증료 감면 등의 지원(자율협 의회의 의결 불요, 제11조 제2항·제3항) 가능
- ⑤ **Fast-Track 프로그램 종결** : Fast-Track 프로그램을 최초로 적용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종결 (제18조 제2항)

(3)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약칭 “대주단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1) 요건

- ①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제11조 제1항 제1호),
- ②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제11조 제1항 제2호),
- ③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제11조 제1항 제3호),

- ④ 협약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 해당 협약에 가입한 기관으로 한정(제2조 제2호)

2) 절차

- ① **대상기업의 결정** : 주채권금융기관이 선정(제11조 제1항)
- ② **대주단자율협의회 구성** : 지원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되고, 주채권은행이 주관(제8조 제1항·제2항), 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기타 정상화 지원 방안 등 심의·의결(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
- ③ **채권행사의 유예** : 주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하고 1년간 채권행사 유예(제13조 제1항)
- ④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 신고**(제14조 제1항)
- ⑤ **신규자금지원** : 대주단자율협의회 심의 후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 하에 지원(대주단자율협의회 의결 필요 없음, 제16조 제1항), 신규자금지원 시에는 지원대상기업과 주채권은행 간 재무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제18조 제2항)
- ⑥ **이행점검** : 주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의 유동성을 매월 점검하고, 신규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특별약정 이행상황 점검(제19조)

(4)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따른 Work Out의 특징(장·단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의 특징(장·단점)과 동일

① 신속한 재무조정

워크아웃절차 중 정상적인 상거래가 가능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과 달리 통상적으로 신규자금지원이 수반되는 관계로, 신속한 재무조정을 통한 기업가치보전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기업회생에 효율적임

② 채권자의 범위 한정

금융기관 자율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이러한 비협약채권자의 비중이 클 경우 효과적인 구조조정 불가능하며, 비협약채권자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③ 자산매각 및 단기 채권회수에 집중 우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의 성격상 기업경영정상화보다 자산매각 및 단기 채권회수에 집중될 우려 있음

④ 해외채권기관의 회수를 막을 수 없는 한계 있음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구제금융

(1) 요건

- ① 자금재조달이 구제금융 성격을 갖을 것, 이는 (i) 사업의 도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ii) 당해 구제금융이 도산 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이 판단(「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제2장)
- ② 프로젝트 금융약정상 대출약정금 증액·상환기일의 연장·이자율의 변경에 대한 대주단 동의 필요,

(2) 절차

- ① 대주단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의향서·확약서 및 구제금융의 구체적인 조건·계획을 제출(「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제2장)
- ② 주무관청이 구제금융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
- ③ 자금재조달 내용을 반영한 프로젝트 금융약정 및 변경 실시협약 체결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구제금융

(3) 특징(장·단점)

① 신속한 재무조정의 가능성

자금재조달 진행중 정상적인 상거래가 가능하고 대주단 협의내용에 따라 신규자금지원도 가능한 관계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보전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 된 기업회생에 효율적 \leftrightarrow 제도 본연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결정절차 지연의 가능성 존재

② 채권자 범위 한정에 따른 다른 채권자의 무임승차의 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구제금융 역시 해당 프로젝트 금융약정에 따른 대주단만을 구속할 것이나,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법인은 해당 민간투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특성상 일반 상거래채무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일반 상거래 채권자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③ 자산매각 및 단기 채권회수에 집중 우려 없음

(i) 당해 구제금융이 도산 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주무관청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ii) 대주단이 기업경영정상화가 아닌 자산매각 및 단기 채권회수에만 집중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대주단이 시행법인의 재무출자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1) 기존 제도 활용시 참여 당사자들 의사결정의 걸림돌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절차와 충돌

- ① 기존제도(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를 적용하더라도 기본계획상 자금재조달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법원과의 권한상충 발생가능, 기업구조조정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 질 수 있음.
- ② 기본계획상 구제금융이 신속히 적용된다면 제도의 본질상 신속한 재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 But, 자금재조달 절차의 복잡성, 검토·협의 절차의 다원성에 따른 구제금융·이익공유 여부 판단 지연 등으로 제도의 취지 훼손 가능성 상존
- ③ 자금재조달 절차
 - 자금재조달 계획서 : PIMAC의 검토(사전검토 대상인 경우 &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라도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 주무관청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 민투심 심의
- ④ 구제금융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건임에도 자금재조달 자체를 위한 보고, 협의, 검토절차 수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책임 문제 때문에 “주무관청의 결정사항이다”라는 원론적 의견이 나올 가능성 존재

⇒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효과적 Work Out 수행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2) 기존 제도 활용을 위한 선결문제

- ① 실질적 측면의 선결문제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와의 충돌 배제
 - 워크아웃 제도의 본질 = 손실의 분담
 - 금융기관은 상환기일 연장, 이자율 조정 등으로 손실을 분담하고 있음
- ⇒ 구제금융에 대한 이익공유 배제 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는 보장
- ② 절차적 측면의 선결문제 : 결정 절차의 보완 필요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은 구제금융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음
 - But, 일반적·추상적 기준, 검토·협의과정에서의 절차 지연 가능성, 판단자인 주무관청의 법적, 계약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

(3) 최근 민자사업 채무재조정 사례

- ① 항만사업 사례 :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문가 자문위원 선정 및 협의를 거쳐 공/사익 조화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구제금융 적용 결정, 이익공유 배제 →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한 첫 단추 마련으로 평가됨
- ② 물류터미널 사례 : 대주단의 상환기일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조치, 주무관청과 기재부의 구제금융 판단 노력 → 리파이낸싱 또는 채무재조정 진행 중

(4) 효율적, 성공적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언

- ① 사업재구조화와 동일한 선상에서 종래 “구제금융”의 차원에서 사업구조조정 (Work Out)제도로의 인식전환 및 변경: *인식의 전환: 구조조정도 사업재구조화의 한 측면임*

☞ 구제금융은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본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이 타당.

→ “구제금융”을 “법령이나 채권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 주무관청 간 자율적 협의에 따른 사업구조조정”으로 변경

② 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기존 법령 등에 의한 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배제: 실질적 측면

- ☞ 법령이나 채권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절차와 이익공유를 적용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개선, 영업활동의 안정성 확보, 고용의 창출 및 유지 등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③ 사업구조조정을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또는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절차 적용시 자금재조달 절차 예외 적용 가능: 절차적 측면

- ☞ 자금재조달 해당여부, 공유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협의, 보고 등의 절차 생략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대면적 협의 및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은 구제금융 여부의 판단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주무관청의 사업구조조정 결정 권한을 재확인

④ 주무관청 결정의 법령적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을 위한 “민자사업구조조정자문위원회” 구성

- ☞ 신속한 검토와 주무관청의 결정을 통한 책임적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제도적 예시>

- (i) 설치: 각 주무관청 내 임의적,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참조: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 (ii) 구성: 주무관청에서 위원장을 맡고 공공(정부나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등)과 민간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
 - 법률, 회계, 금융 등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의 전문가
 -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관청에 공공 및 민간의 전문가 Pool을 마련,
각 주무관청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재량으로 선임
- (iii) 업무:
 - 당해 사업의 현황 및 분석 자료에 기초한 사업개선 가능성, 사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여부 검토
(예컨대, 기업도산절차에서의 기업회생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검토 등)
 - 주무관청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개진 및 조언

감사합니다

Lee
& Ko